

# 조로 대한민국... KDI “30년후 경제성장률 0%대”

〈早老〉

정년 없애고 임금 체계 개편해야  
고령층에 안정적 노동 환경을

## ‘고령화 사회 경제 전망’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르면 2031년쯤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인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년 제도를 없애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나리오별 전망을 살펴보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G7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의 성장률이 2021-2030년에 평균 1.7%, 2031-2040년에 평균 0.9%, 2041-2050년에 평균 0.6%까지 하락했다.

이는 G7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후

대부분 은퇴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비슷한 고용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해도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에 1.8%, 0.9%, 0.7%로 하락했다.

일본의 고용 구조를 대입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같은기간 1.9%, 1.1%, 0.8%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지 않고 2017년 수준에서 고정되면 2.0%, 1.3%, 1.0%로 하락했다. 하락 폭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1% 안팎으로 꺾이는 셈이다. 이재준 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금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성장을 하락세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지금 출산율을 올려도 본격적인 근로 활동을 하기엔 30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에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지 않으면 연평균 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보다 0.2-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위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고령세대의 노동 참여”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 제도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며 “정년제 폐지 혹은 근로 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연구원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및 제반 제도들도 재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훈련 체계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 체계를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현재 농가는 102만 1천 가구, 어가는 5만 2천 가구, 임가는 8만 2천 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 2.5%, 2.1%씩 줄어든 수치다. 8년 전인 2010년 농가 수는 117만 7318가구, 어가는 6만 5775가구, 임가는 9만 6108가구였다. 인구는 농가 231만 5천명, 어가 11만 7천명, 임가는 18만 9천명이었다. 인구 또한 전년 대비 4.4%, 4.0%, 3.2%씩 줄었다. 2010년 농·림·어가 인구는 306만 2956명, 17만 1191명, 25만 3656명이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르면 2031년쯤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인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구형은 2인 가구로, 농가 54.8%, 어가 57.4%, 임가 58.9%가 두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인 가구 27.4%의 2배를 넘는 비율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도시보다

높았다.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은 14.3%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정구현 농어업통계과장은 “농촌 인구는 줄지만 고령화

는 심화하는 구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규모화에 따라 판매수입 1억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ast@meconomynews.com

## “노조원 장례 위로금지급, 과거엔 적법”

대법, “장례 권한 유족에게 있다” 판시  
辯 “삼성이 지급한 유족 위로금 적법”

### 삼성 1차 공판 새 국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 1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자살 및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불거진 속칭 ‘시신탈취’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노조장(葬)’을 회망했던 염씨의 유지와 달리, 유족들이 삼성측으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과정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검찰은 삼성이 염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에 “상생협력 차원이 아니라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위로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회계 처리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특경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장례 권한은 노조가 아닌 유족에게 있고, 위로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받아쳤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염씨 유족에 대한 위로금에만 특

경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염씨 장례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시신탈취’라는 자극적 꼬리표를 달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염씨의 부친은 ‘노조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치렀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삼성측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경위와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며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과 달리 “문제의 위로금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위로금 지급을 횡령죄로 본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형법상 횡령은 ‘위법한 행위로 회사의 신용 및 이익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회사 측의 위로금 지급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노조가 위법하게



사진=시정경제DB

점유한 고인의 시신을 유족의 뜻에 따라 인도한 경찰의 행위를 ‘탈취’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나두식 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다. 나 지회장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장례를 주재할 권한은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노조가 장례를 주재할 권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즉 유족이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조장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후 유족이 의사를 변경했다면, 노조는 일시적으로 장례를 주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 한국, 한일 수산물 분쟁서 어떻게 역전승했다?

미측, 수입규제 도미노 해제 우려 가능성  
통상부, 민간전문가 영입 등 숨은 노력

우리나라가 예상을 깨고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의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지면 미국도 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이례적인 뒤집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의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가 SPS 협정 관련 분쟁

에서 이례적으로 1심 결과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통상 당국 내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려고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인 정하늘씨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상소기구 내 미국의 불안감이 한국 승소의 숨은 공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TO 상소기구는 사건당 3명의 위원을 배정한다. 이번에 배정된 위원은 미국과 인도, 모리셔스 국적의 위원이다. 인도와 모리셔스는 각각 2016년 2월과

10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었다. 반면 미국은 일부 수입규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소기구 내 심리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의결과정에서 미국의 발언이 컸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규제하는 미국이 한국이 지면 그 여파가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정환 기자 eruca@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Industry Craft Silver Lion Campaign

Title: MIGUEL 미구엘  
Client: ALZHEIMER RESEARCH INITIATIVE 알츠하이머 연구기관  
Product: CALL FOR DONATIONS 후원 및 기부 요청  
Agency: BBDO GROUP GERMANY, Dusseldorf

Piece by piece ALZHEIMER'S takes away the memory. Help to win the fight. 조금씩 기억이 사라져 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